

|              |                    |                  |
|--------------|--------------------|------------------|
|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br>결<br>사<br>항 |
| 의 결<br>연 월 일 | 2021. . .<br>(제 회) |                  |

공 무 원 연 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                    |
|--------|--------------------|
| 제 출 자  | 국무총리<br>(인사혁신처 소관) |
| 제출 연월일 | 2021. . .          |

법 제 처 심 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양육책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퇴직유족급여 수급자격 개선 등 연금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지급 합리화(안 제24조, 안 제59조의2, 안 별표5)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

나. 성년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안 제3조)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시 공무원 등이 사망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 다.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1)

법 제3조제1항제5호 “유족”의 요건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공무원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24.~2021. 5. 3.)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한다”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상태를 말한다”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3조제3항”을 “제6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9조의2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및 정도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 등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감액) ① 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은 별

표 5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같은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급여제한 심의 대상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급여제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한 심의 대상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을 신청할 때 제51조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청구 또는 제52조에 따른 수급권 이전신청이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 청구 또는 수급권 이전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 심의 대상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

책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신청서

2.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가 제출한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육책임 이행여부 등에 관한 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급여제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책임의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사람이 급여제한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낼 수 있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조사결과 등을 받으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해당여부 및 감액 정도를 결정하고, 그 급여제한 결정서를 신청인과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급여제한 결정서 내용에 따라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상자    | 인정기준                                                                                                                |
|--------|---------------------------------------------------------------------------------------------------------------------|
| 가. 배우자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br>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br>「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소 판결문」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 나. 부모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인정                                                                                     |

|                                      |                                                                                                                                                                                                                                                                                                                    |
|--------------------------------------|--------------------------------------------------------------------------------------------------------------------------------------------------------------------------------------------------------------------------------------------------------------------------------------------------------------------|
|                                      | <p>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p> <p>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p> <p>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p> |
| 다.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자녀                   | <p>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 인정</p> <p>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p>                                                                                                                                                                                         |
| 라.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자녀<br>· 손자녀<br>· 조부모 | <p>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 인정</p> <p>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p> <p>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p>                                                      |

별표 5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5]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의 판단 기준 및 감액비율(제59조의2 관련)

| 구분                            | 대상자 |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                                                                                                                                                |
|-------------------------------|-----|------------------------------------------------------------------------------------------------------------------------------------------------------------|
|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 | 부모  | <p>1)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p> <p>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또는 미성년 기간 중 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p> <p>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p> |

|                                                                                                                                                                                                                                                                                                                                                                                 |  |                                                                                                                                                                                                         |
|---------------------------------------------------------------------------------------------------------------------------------------------------------------------------------------------------------------------------------------------------------------------------------------------------------------------------------------------------------------------------------|--|---------------------------------------------------------------------------------------------------------------------------------------------------------------------------------------------------------|
|                                                                                                                                                                                                                                                                                                                                                                                 |  | <p>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여부 및 정도</p> <p>다)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복리를 침해한 여부 및 정도</p> <p>2) 퇴직유족급여 감액비율</p> <p>퇴직유족급여 감액비율은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lt; 비 고 &gt;</p> <p>1. 1)-가)~다)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미성년 기간”은 생후부터 19세 미만을 말한다.</p> <p>2. 1)-가)에서 “주거를 같이 한”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거나, 취학·취업·요양·주거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생활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p> <p>3. 1)-가)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은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미성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한다.</p>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감액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양사실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퇴직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생략)                                                                                                                      |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   |   |
|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② -----<br>-----<br>-----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br>-----<br>-----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도를 말한다.         |   |   |   |
| ③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 ③ -----<br>-----<br>-----<br>-----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br>-----<br>--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상태를 말한다. |   |   |   |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   |   |
| 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 제63조제3                                                                    | 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br>-----<br>----- 제63조제3                                        |   |   |   |

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항 및 제4항-----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59조의2에 따른 급여제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정도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 등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감액)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은 별표 5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같은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퇴직 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급여제한 심의 대상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한 심의 대상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을 신청할 때 제51조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청구 또는 제52조에 따른 수급권 이전신청이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 청구 또는 수급권 이전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 심의 대상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신청서
2.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가 제출한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육책임 이행여부 등에 관한 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급여제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제63조제4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책임의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사람이 급여제한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낼 수 있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조사결과 등을 받으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해당여부 및 감액 정도를 결정하고, 그 급여제한 결정서를 신청인과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급여제한 결정서 내용에 따라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별표1] 공무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대상자                       | 인정기준                                                                                                                                                                                                                                                       |
|---------------------------|------------------------------------------------------------------------------------------------------------------------------------------------------------------------------------------------------------------------------------------------------------|
| 배우자<br>·<br>자녀<br>·<br>부모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인 경우: 인정<br>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br>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br>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1) 공무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br>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 |

**[별표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대상자   | 인정기준                                                                                                                                           |
|-------|------------------------------------------------------------------------------------------------------------------------------------------------|
| 가.배우자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br>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소 판결문」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 나.부모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인정<br>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br>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br>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

|                                                | 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p>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p>                                                                                                                                                          |    |     |             |                               |
|------------------------------------------------|------------------------------------------------------------------------------------------------------------------------------------------------------------------------------------------------------------------------------------------------|---------------------------------------------------------------------------------------------------------------------------------------------------------------------------------------------------------------------------------------------------------------------------------------------------------------------------------------------------------|----|-----|-------------|-------------------------------|
| 손자녀<br>·<br>조부모                                | <p>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p> <p>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p> <p>가. 공무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p> | <p>다.법 제3조제2항 제1호의 자녀</p> <p>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p> <p>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 판결문」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p>                                                                                                                                                                                                       |    |     |             |                               |
|                                                |                                                                                                                                                                                                                                                | <p>라.법 제3조제2항 제2호의 자녀<br/>· 손자녀<br/>· 조부모</p> <p>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p> <p>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p> <p>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p>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 <p>[별표5] <b>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b></p> <p style="text-align: center;"><b>불이행의 판단 기준 및 감액비율(제59조의2 관련)</b></p>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대상자</th><th>판단기준 및 감액비율</th></tr> </thead> <tbody> <tr> <td>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td><td>부 모</td><td> <p>1)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p> <p>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또는 미성년 기간 중 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p> <p>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범</p> </td></tr> </tbody> </table> | 구분 | 대상자 |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 |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 |
| 구분                                             | 대상자                                                                                                                                                                                                                                            |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                                                                                                                                                                                                                                                                                                                                             |    |     |             |                               |
|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                  | 부 모                                                                                                                                                                                                                                            | <p>1)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p> <p>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또는 미성년 기간 중 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p> <p>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범</p>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 data-bbox="798 224 925 784"></td><td data-bbox="925 224 1396 784"> <p>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여부 및 정도</p> <p>다)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복리를 침해한 여부 및 정도</p> <p>2) 퇴직유족급여 감액비율</p> <p>퇴직유족급여 감액비율은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td></tr> <tr> <td colspan="2" data-bbox="798 784 1396 1323"> <p style="text-align: center;">&lt; 비 고 &gt;</p> <p>1. 1)-가)~다)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미성년 기간"은 생후부터 19세 미만을 말한다.</p> <p>2. 1)-가)에서 "주거를 같이 한"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거나, 취학취업요양주거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생활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p> <p>3. 1)-가)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은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미성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한다.</p> </td></tr> </table> |  | <p>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여부 및 정도</p> <p>다)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복리를 침해한 여부 및 정도</p> <p>2) 퇴직유족급여 감액비율</p> <p>퇴직유족급여 감액비율은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lt; 비 고 &gt;</p> <p>1. 1)-가)~다)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미성년 기간"은 생후부터 19세 미만을 말한다.</p> <p>2. 1)-가)에서 "주거를 같이 한"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거나, 취학취업요양주거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생활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p> <p>3. 1)-가)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은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미성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한다.</p> |  |
|                                                                                                                                                                                                                                                                                                                                                                              | <p>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여부 및 정도</p> <p>다)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복리를 침해한 여부 및 정도</p> <p>2) 퇴직유족급여 감액비율</p> <p>퇴직유족급여 감액비율은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lt; 비 고 &gt;</p> <p>1. 1)-가)~다)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미성년 기간"은 생후부터 19세 미만을 말한다.</p> <p>2. 1)-가)에서 "주거를 같이 한"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거나, 취학취업요양주거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생활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p> <p>3. 1)-가)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은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미성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한다.</p>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
| 연 락 처       | (044) 201 - 8417 |